

행 정 법

1. 다음 중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는 속하나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 아닌 것은?

- ① 국회의사무총장의 직원임명 ② 행정심판의 재결
③ 부령(部令)의 제정 ④ 조세채납처분
⑤ 조례의 제정

2.국민이 행정기관에 신고(申告)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가장 옳은 것은?

- ① 행정기관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하자가 있는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지체없이 반려한다.
- ② 법규가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더라도 행정기관이 수리(受理)하여야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 ③ 우편으로 신고한 경우, 우편물을 발송한 때에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 ④ 신고에 조건이나 부담과 같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 ⑤ 행정기관이 수리하여야 신고의무가 해소되는 경우에 수리를 거부하면 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법규명령(法規命令)의 통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행행위의 매개없이 직접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규명령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 ②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법규명령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법제처장은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③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함에 있어서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명령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당해 명령 등의 개정·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법원에 의한 구체적 규범통제에서 위헌 내지 위법판결을 받은 법규명령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그 적용이 배제된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규명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이를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행정입법의 범위에 관한 현행법령 및 판례의 태도와 합치되지 않는 것은?

- ①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어야 제정할 수 있다.
- ② 이러한 위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임의 근거조항만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령으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위임의 구체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본권 침해영역에서는 급부영역에서보다 그 구체성의 요구가 강화된다.
- ⑤ 상위법령은 개정되었으나 그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을 때는 구법령의 집행명령이 여전히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5.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규칙은 이를 대외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하여 대부분 관보에 의하여 공포하고 있다.
- ② 행정규칙은 법령에서 인정된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발령하는 것이므로 법령의 개별적, 구체적 수권을 요하지 않는다.
- ③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대해 다수설은 판례와 마찬가지로 규범구체화행정규칙의 예로 본다.
- ④ 행정규칙은 그 형식면에서 문서나 구술 모두 가능하며, 절차면에서도 일반적으로 따라야 할 법정절차가 없다.
- 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성립요건을 갖춘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하며, 수명기관에 도달한 때부터 구속력을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6.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계약이란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 ② 공법상 계약에 의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에 상응하여 탄력적인 행정목적달성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무상으로는 실정법상의 근거를 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③ 행정주체와 사인간의 공법상 계약은 행정행위 대신에 체결되는 경우도 있다.
- ④ 공법상의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사법상 계약과 구분된다.
- ⑤ 성질상 쌍방적 행위이므로 쌍방적 행정행위도 여기에 해당된다.

7. 다음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에 관한 학설들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요건재량설은 행정권발동의 근거가 되는 법규정의 형식 중 이른바 요건규정에 단순히 처분권한만 규정된 경우(공백규정), 단순한 공익관념만을 규정한 경우(종국목적)를 재량행위로 보는 입장이다.
- ② 효과재량설은 법률효과적 측면에서 행정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決定裁量)와 다수의 행위 중에서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選擇裁量)를 재량의 본질로 이해하여 법률효과 발생에 행정청의 자유로운 판단을 허용하는 것을 재량행위라고 하는 것이다.
- ③ 바호프(Bachof)는 사실의 불확정개념에의 포섭단계(包攝段階)에서 법원의 재판통제에서 배제되는 독자적 판단여지가 행정청에게 인정되는 경우에 불확정개념의 판단권이 행정청에게 있다고 한다.
- ④ 에릭센(Erichsen)은 불확정개념의 해석단계(解釋段階)에서 가치개념과 경험개념을 구분하여 경험개념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 ⑤ 효과재량설에 따르면 수익적 처분은 재량행위로, 침익적 처분은 기속행위로 이해된다.

8.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발령기관의 표시가 없는 행위라도 내용적 구속력이 있다.
- ② 공정력이 있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원고가 처분의 위법을 입증하여야 한다.
- ③ 이른바 구성요건적 효력이란 처분의 실제적 진실 또는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이다.
- ④ 불가변력 있는 행정행위라도 하자를 발견한 처분청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⑤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9. 다음 중 명령적 행정행위인 것은?

- ① 조세의 부과(賦課) ② 납세자의 독촉(督促)
- ③ 공무원의 임명(任命) ④ 공기업의 특허(特許)
- ⑤ 법인설립의 인가(認可)

10. 액화석유가스(LPG)판매사업의 허가를 하면서 관할행정청은 다음과 같은 허가조건을 부가하였다. 이 허가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영업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영업소 인근 5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3. 4. (생략)
5. 관할 행정청은 영업자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법령에 근거한 명령에 위반한 때 또는
행정청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상 없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① 이 허가조건은 기속행위에 부가하였으므로 무효이다.
- ② 허가조건 제1항은 부담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대방 보호 등의 이념에 비추어 합리적이다.
- ③ 영업자가 시설을 갖추어 영업을 개시할 때까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 허가의 효력은 허가조건 제1항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
- ④ 허가조건 제5항에 따라 관할 행정청은 언제라도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⑤ 판례에 의하면 허가의 상대방은 이 허가조건만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1.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법적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와 합치되지 않는 것은?

- ① 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관 명의로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은 무효다.
- ② 개발부담금의 납부고지서에 납부근거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면 그 부과처분은 취소할 수 있다.
- ③ 발령 행정청의 서명 날인을 결한 행정행위는 무효이므로 사후에 정정 보완할 수 없다.
- ④ 행정처분 후에 그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면 그 행정처분은 무효가 된다.
- 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다.

12. 부담(負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통설적인 견해에 따르면 부담이 무효이면 주된 행정행위도 무효가 된다.
- ② 부담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③ 부담은 진정일부취소쟁송의 대상이 된다.
- ④ 부담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주된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 ⑤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사후부관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13. 다음 중 물적 행정행위(物的 行政行爲)로 파악하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 ① 도로의 공용지정 행위
- ② 골동품의 문화재로의 지정 행위
- ③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
- ④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 ⑤ 주차금지구역의 지정

14. 행정청의 직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권취소의 경우 감독청도 취소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직권취소도 행정행위인 까닭에 당연히 행정행위의 발동권한을 갖는 처분청만이 행사할 수 있고 법적 근거가 없는 한 감독청은 취소명령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소극설과, 직권취소는 자율적 행정통제수단이므로 당연히 감독청도 취소할 수 있다는 적극설이 대립한다.
- ② 새로운 후발적 사정에 따라 당해 행위를 존속시킬 것인지 아니면 소멸시킬 것인지를 판단하는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철회권이나 취소권은 그 성질을 같이한다.
- ③ 직권취소는 주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법치주의 특히 법률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위법한 행정행위는 법적 근거 없이도 행정청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직권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④ 취소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량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행정청이 취소권행사에 관한 재량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적합성과 법적 안정성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⑤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15.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 ① 해제조건의 성취
- ② 유보된 철회사유의 발생
- ③ 법령의 개정
- ④ 상대방의 의무위반
- ⑤ 중대한 공익이 침해될 우려

16. 다음 중 불가변력이 발생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 ① 발명권 특허
- ② 당선인결정
- ③ 교과서 검인정
- ④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 ⑤ 도로점용허가의 철회

17. 다음 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도 정보공개청구권을 갖는다.
- ②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은 그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③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위원회가 심의한다.
- ④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⑤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8.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 ① 행정업무의 질적 향상
- ②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제고
- ③ 행정규제의 완화
- ④ 행정의 공개
- ⑤ 사법적 구제수단의 보완

19. 현행법상의 의견청취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현행법상의 의견청취절차는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로 나누어진다.
- ②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이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조 및 제28조에서 규정하는 공청회는 개별법이 정하는 공청회의 예가 된다.
- ⑤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이익처분은 하자 있는 처분이 되어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 할 수 있다.

20. 과태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형벌과 같이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고의를 요구하고 있다.
- ② 원칙적으로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부과된다.

- ③ 법원의 과태료 부과결정에 대하여 상대방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④ 근래에는 일차적으로 주무행정청이 직접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부과절차로 이행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이 늘어가고 있다.
- ⑤ 과태료와 벌금은 병과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21. 다음은 통고처분에 대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은 고발하여야 한다.
- ②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③ 세무서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등은 범칙사실의 발견시 범칙자에게 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적발하는데 필요한 조사권을 가진다.
- ⑤ 범칙자가 통고처분의 내용을 이행한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22. 다음 중 재산권에 대한 공법상 제약으로서 손실보상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가 가장 어려운 것은?

- ① 위락시설 설치를 위하여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 ② 군작전수행을 위하여 화물운송회사의 차량을 징발하는 경우
- ③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에서 수입한 쇠고기를 수거하여 폐기처분하는 경우
- ④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나대지를 지목(地目)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⑤ 하천의 흐름이 바뀌어 사유지가 하천에 편입되게 된 경우

23.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당해 공무원의 선임감독에 대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없다.
- ② 국가배상법은 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당해 공무원에게 고의·과실이 없으면 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 ③ 당해 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개인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④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배상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게 당연히 구상권을 가진다.
- ⑤ 당해 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봉급지불자가 다를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선임감독자만 책임을 진다.

24.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은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있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종래의 판례에 비추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입법작용도 직무행위에 해당한다.
- ② 국회의원 또는 합의체로서의 국회도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에 포함된다.

30.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청구인용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서 동일 당사자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할 수 없다.
- ②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그 후의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당해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 ③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었어도 당해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은 제기할 수 있다.
- ④ 취소판결이 처분의 절차나 형식의 하자를 이유로 한 경우에도 행정청은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다.
- ⑤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처분시를 기점으로 발생한다.

3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판례에 따르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는 자가 원고적격을 갖는다.
- ② 인용판결이 있을 경우, 행정청은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적극적 처분을 하거나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처분을 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 ③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④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판결시이다.
- ⑤ 법령이 일정한 상태에서 부작위를 거부처분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2. 현행법상 법령의 위임없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계변경
- ②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
- ③ 법령기준보다 강화된 환경기준
- ④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의 처리기준
- ⑤ 당해 지방자치단체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국회의원선거권을 인정하는 것

33. 법률의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사무는?

- ①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 ②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③ 호적 및 주민등록 관리
- ④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⑤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34.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간과하고 임용된 자를 발견한 임용권자가 그 자에 대한 임용행위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보냈다. 이 통지의 법적 성질을 판례에 따라 이해하면?

- ① 일단 유효했던 임용행위를 하자를 이유로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 ②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이 소멸되는 철회에 해당한다.
- ③ 결격사유의 종류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행위가 된다.
- ④ 처음부터 임용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 ⑤ 임용행위의 실효(失効)를 통지하는 행위이다.

35. 다음 중 경찰권발동(警察權發動)의 근거에 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권은 법규의 근거가 있는 때에 발동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경찰권의 근거에 관한 법규는 불확정개념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 ③ 경찰권은 법률과 위임명령에 엄격히 기속되어 행사되므로 재량의 여지가 없다.
- ④ 경찰권은 개개인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개별법령의 근거를 요한다.
- ⑤ 경찰권 발동에 관한 법규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과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법규명령도 포함된다.

36. 공물의 성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타인소유의 물건을 공물로 지정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물건에 대한 권원을 취득하여야 한다.
- ② 공공용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형체적 요소와 의사적 요소인 공용지정행위를 필요로 한다.
- ③ 공용물의 성립에 있어서는 형체적 요소를 갖추어 행정주체가 사실상 사용을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고 별도의 공용지정행위를 갖출 필요가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 ④ 보존공물이 성립하기 위해서도 형체적 요소와 공용지정행위를 필요로 한다.
- ⑤ 자연공물의 경우에는 형체적 요소만 갖추면 충분하고 별도의 공용지정행위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종래 학설의 입장이다.

37. 국유지에 설치된 국도(國道)에 관한 설명으로 현행법상 가장 옳은 것은?

- ① 이 도로부지는 취득시효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② 이 도로부지는 강제집행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③ 포장공사가 끝났더라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야만 도로의 성격을 취득한다.
- ④ 경계확정의 소(訴) 등 판결에 의해서만 국도의 범위가 결정된다.
- ⑤ 국가는 재정수입을 확충하기 위하여 이 도로부지를 양도할 수 있다.

38. 다음 중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설교통부장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 군수도 관할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을 갖는다.
- ②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은 고시되어야 하고,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 ⑤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으로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으로 구분된다.

39. 공용수용에 있어서 환매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용의 목적물인 토지가 당해 공익사업에 불필요하게 되었거나 현실적으로 공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 ②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 및 환매권자는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③ 사업시행자는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로부터 환매에 관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⑤ 환매권은 수용의 등기가 되어 있을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0. 현행법상의 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현행법상 공시지가는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평가된 가격일 수 있다.
- ② 공시지가를 넘는 사인간의 토지거래는 무효이다.
- ③ 국가나 공공기관이 토지를 취득할 때는 해당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보상한다.
- ④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과세처분의 직접기준이 된다.
- ⑤ 개별공시지가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